



금융개혁회의 경과와 향후계획

2015. 12. 2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경과	1
II. 추진성과	3
III. 향후과제	12
< 참고1 > 주요과제 논의사항 요약	13
< 참고2 >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	23
< 참고3 > 금융개혁회의 심의안건 목록	25

I. 추진경과

1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3.17일)

○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및 실천과제 선정(참고1)

2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1 추진체계” 구축(3월)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전 자문

3 금융개혁회의 17차례, 자문단 회의 74회, 추진단 회의 4회 개최

○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가지” 원칙과 방식 마련

<원칙> ① 개혁방안은 “즉시 조치(제도화)”, 즉시 조치가 어려운 과제는 “추진일정” 제시
 ② 외부기관 설문조사나 자체 점검을 통해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
 ③ “Stand Still 원칙”을 설정해서 금융사고 등 개혁과제 추진과 반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보다 규제수준 등이 개악되지 않도록 노력”

<방식> ①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② 해외사례 벤치마크
 ③ 상시 점검 및 평가·보완

○ 자문단은 개혁회의 심의안건을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

4 금융개혁회의는 세부실천과제 70개중 60개 과제를 심의·발표

- 개혁회의 1호 안건으로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 방안 심의
- 거래소 개편,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주요 과제 심의
- 해외진출·연금·세제 등 금융외연 확대를 위한 과제도 논의

5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실태 서베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 금융개혁 체감도 평가를 위해 2차례 대국민 서베이 (6월, 12월)
-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는 심층면접(FGI) 병행 (11월)

참고1 금융개혁 방향: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I. 자율 책임 문화 조성	1 금융감독 쇄신	1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2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2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4 혁신·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 내부통제·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6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II. 실물 지원 역량 강화	3 기술금융 확충	7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8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9 전문조직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4 자본시장 기능 강화	10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11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12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III. 금융 산업 경쟁 제고	5 핀테크 육성	13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1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15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6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16 금융규제 유형별(Category) 강화·완화 17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18 신상품·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 외환규제 개선
접근 방식	현장 중심 속도감 있게	해외 사례 벤치마크 상시 점검 및 평가·보완

II. 추진성과

① 법령 규제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그림자 규제 등 금융당국의 관행과 태도 변화를 함께 추진 → 자율에 기초한 경쟁

- 검사·제재 개혁을 통해 현장의 확인서·문답서가 폐지되는 등 감독당국의 검사관행 변화를 금융회사도 체감

※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폐지 : ('14) 17회 → ('15) 15회 → ('17) 원칙 폐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 ('01~'14) 10건 → ('15) 100건
→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 유도

- 법령 규제도 전수조사(1,064건)하여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 질서, 소비자 보호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211건 규제개혁

-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완화 하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는 강화

*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core)로서 전업주의 유지, 판매·자문은 겸업 확대

- 건전성과 시장질서규제는 선진화하고 소비자보호규제는 강화

- 비공식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고 통제 절차를 제도화 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 금융행정지도 : ('14말) 약 700여건 → ('15.12월) 50건

- 특히, 가격, 인사, 배당 등 경영사항에 대한 불개입 원칙 및 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과 관련된 제재금지원칙 규정화

② 금융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틀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모델과 다양한 서비스 도입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23년), 거래소 구조개편(11년), 보험 산업 구조개편(22년) 등 오랜 이슈였던 과제의 도입방안 확정

- 비대면 실명확인,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IT 등 비금융 기관과 협조·경쟁 생태계 구축 → 핀테크 활성화기반 마련

- 계좌이동서비스, 복합점포, 온라인보험슈퍼마켓, 클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 금융지주·은행·금투·보험·서민금융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③ 은행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

- 기술금융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외연을 확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0년만에 중소기업 정책보증 대개편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진입·설정·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10.25일 자본시장법 개정·시행)

- 벤처투자, M&A,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코넥스,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 및 파생상품·장외시장 인프라 개선 추진

④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 및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 : 민원건수 위주 → 제도·시스템 등 종합평가
민원·분쟁처리기간 단축 : 평균 42일 → 14일(영업일 기준)
1사1교 확대 : 1차신청 1,497개교 → 2차신청 2,531개교(전체 학교의 22.1%)

⑤ 외환·세제·연금·투자금융 등 부처협업과제에서도 성과창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선순환 생태계 구축, 외환제도 개편, 공사연금제도 개편 등

⑥ 금융개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 개혁과제에 대해 2차례(6월, 12월) 대국민 서베이를 실시

-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개혁, 핀테크,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FGI)을 실시하여 실태 점검하고 보완사항 분석(11~12월)

< 은행 >

- ① (인터넷전문은행) 23년만에 은행업 신규 인가로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확산('16.하)
→ 간편하게 결제·송금할 수 있고 10%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 ② (비대면 실명확인) 22년만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홍채인식, 영상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방식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 계좌개설을 비롯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One-Stop으로 가능, 고객 확인 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확대
- ③ (계좌이동서비스) 클릭 한 번으로 자동이체를 손쉽게 바꿀 수 있어, 혜택을 많이 주는 은행으로 주거거래좌 변경이 용이
* 이용실적(10.30~12.18, 만건): 접속 61.7, 변경 20.4, 해지 17.2
→ 은행간 경쟁과 혁신을 촉발하여 대고객 서비스 향상

< 자본시장 >

- ④ (클라우드펀딩)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 조달 가능('16.1월)
→ 창업자금 모집이 쉬워지고 소액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 제공
-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바꿔 담고 순이익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16.1월)
→ 종합 자산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 ⑥ (거래소 구조개편) 11년만에 한국거래소를 지주체제로 개편하여 코스피, 코스닥 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 마련
→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들이 추가 상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
* 자본시장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

< 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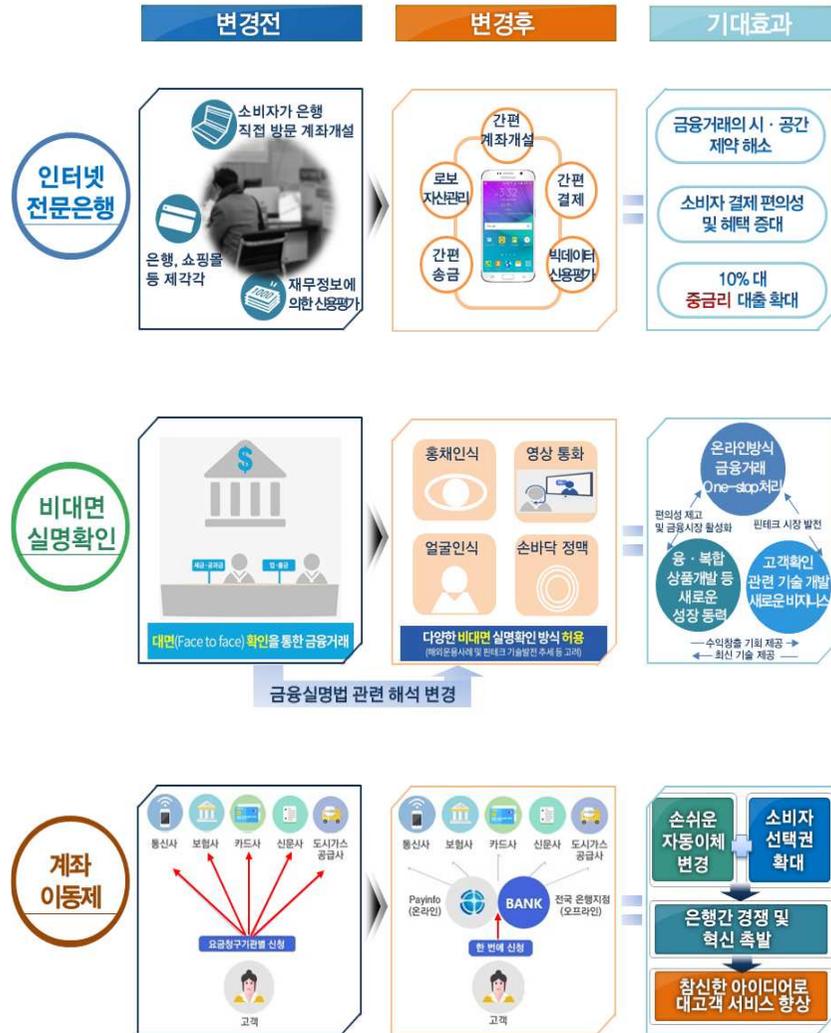
- ⑦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인터넷으로 직접 여러 상품을 비교·가입
→ 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가격 경쟁을 촉발하여 보험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금융편의 제고
* 자동차보험 등 총 217개 보험상품 비교가입 (11.30~12.15, 약 16만명 방문)
- ⑧ (보험상품 자율성 제고) 22년만에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등 사전적 규제를 사후보고제 등 사후감독 강화체제로 전환
→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병자·고령자에게도 제공되어 쉽고 저렴하게 보험상품 구매

< 서민금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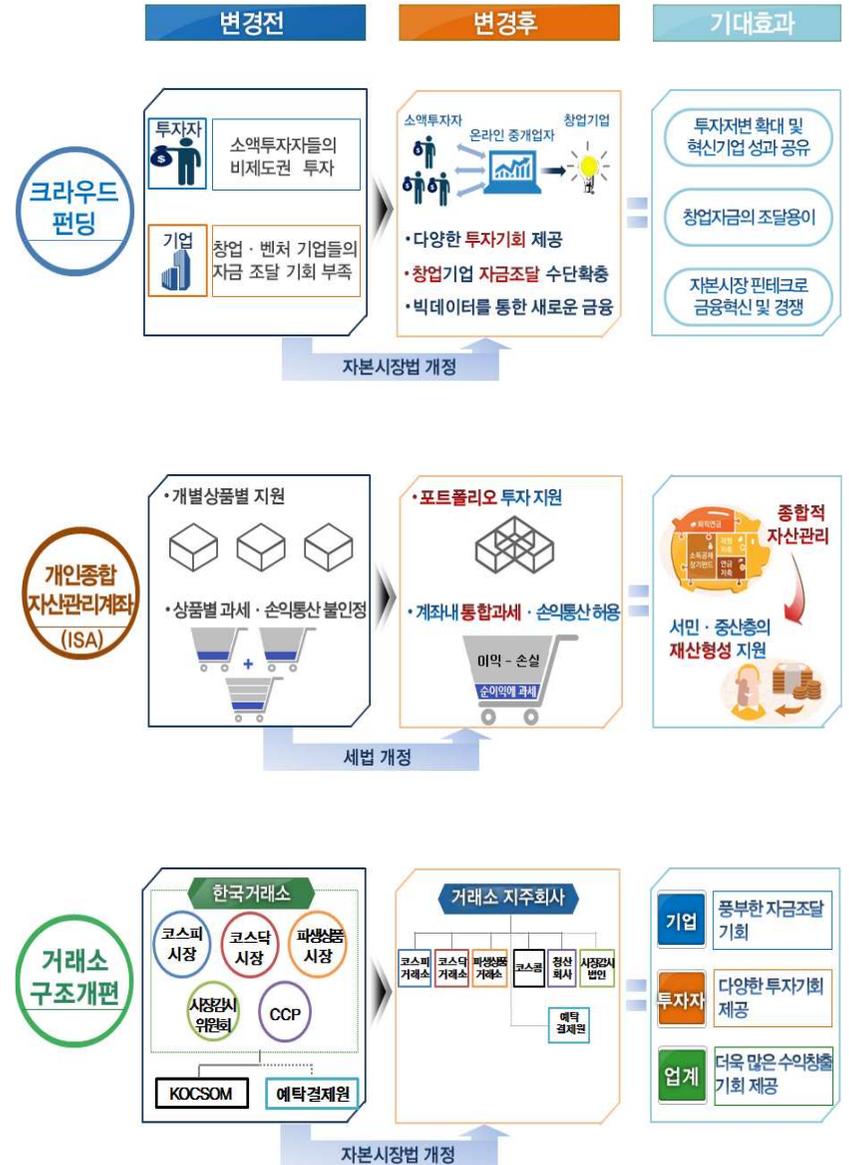
- ⑨ (서민금융지원대책)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정책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상품도 제공
→ '18년까지 270만명 22조원 지원
(4대 정책상품 210만명 20조원, 맞춤형 상품 60만명 2조원 지원)
- 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34.9% → 29.9% 내외 (정부안 기준)
→ 최대 330만명에게 약 7,000억원(추정)의 이자부담을 경감
* 대부업법 개정 등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

참고2 금융개혁으로 달라지는 10대 금융시장과 금융 실생활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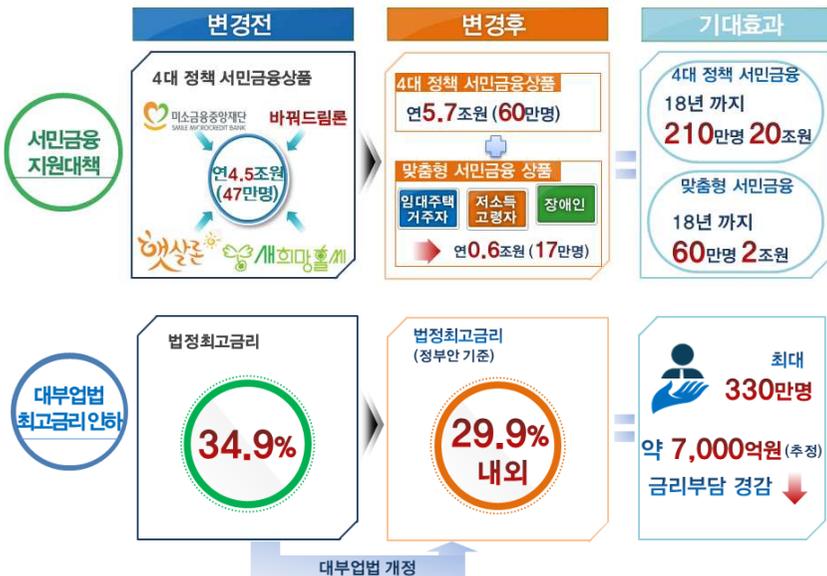
자본시장



보험



서민금융



참고3 숫자로 본 금융개혁

분류	숫자	내용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20대 금융관행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5대악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금융사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217건	그놈 목소리 공개 건수
	337 → 145억원	그놈 목소리 공개 후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액변화(50% 이상 축소)
	108회	'15.7.1~12.17까지 총 462회 검사 중 건전성 검사 횟수
금융규제 개혁	11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상 권리 수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4가지	금융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 하여 특성에 맞게 규제개혁
	1,064개	유형화한 금융규제 조항 수
	211개	금융규제 개혁으로 개선한 규제 건수
핀테크 활성화	72개 → 32개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항목 축소
	254건	핀테크 지원센터의 법률·행정·기술자문 등 컨설팅 제공건수
	총296건, 2,733억원 접속 61.7 변경 20.4 해지 17.2	산은·기은의 핀테크 자금지원
	217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실적(만건)
	16만명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가입 가능 상품 수
	44개(5월) → 약 360개(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방문자 수
	24,300명 ⁽¹⁴⁾ → 25,600명 ^(15말, 예상)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수
	67개 ⁽¹⁴⁾ → 84개 ^(15.11월말)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
	6개사 1.8만건	전자금융업체 수
	10%대	실물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건수
	3,193 ⁽¹⁴⁾ → 5,720 ^(15.2분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73.1%	모바일결제규모(십억원)
74.2%	핀테크 기업 정부 정책 만족도	
23년	국민들의 핀테크 서비스만족도	
22년	23년만에 새로운 은행 인가 (인터넷전문은행)	
	22년만에 비대면실명확인 개선	

분류	숫자	내용
기술금융	40년	40년만에 정책보증 대 개편
	8만9천건, 26.2조원	우수 기술기업에 기술신용대출 공급(151~11월)
	1.08%p	기술금융을 받은 기업의 일반기업 대비 평균 대출금리 하락폭
	24.9%	순수 신용대출 비중(일반 중기대출 : 11.5%)
	96.3%	기술금융을 이용한 중소기업 CEO 중 기술금융 지속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
	72.8%	은행 지점장들이 '무늬만 기술금융'이 사라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4~5만개	연대보증 면제 기업 수 (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철폐)
	4.2조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규모('15.11월말)
자본시장 활성화	6,570억원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 조성 규모('15.11월말)
	102개('15)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수('14년 70개)
	12개('15)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 ('05~'14년 연평균 1.5개)
	3.5조원('15)	코넥스 상장기업 가치('14년말 1.4조원)
	16.4억원('15.11월말)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15.1월 7.5억원)
	5배	코넥스개장 2년반 만에 상장기업 수 5배 증가 * 21('13.7.1)→45('13.末)→71('14.末)→ 108('15.末)
	1,591건	연간 공시부담 경감예상 건수
	11년	11년만의 거래소 구조개편
서민금융 지원	1.7조원	신규 벤처투자 규모 ('15.10월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20조원, 210만	'18년까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
	2조원, 60만명	'18년까지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 규모
	27.9%	대부업법 법정최고금리 인하 (기존 34.9%)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0.7조원, 330만명	대부업법 최고금리인하시 이자부담 경감
	250만원	청년·서민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발생이익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
	431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방문 금융회사 수
	156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방문 중소기업 수
	117명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방문 금융소비자
	3,575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접수 건의 건수
45.8%	접수된 건의에 대한 수용률	
100건	'15년 비조치의견서 회신 건수 ('01~'14년 10건)	

III. 향후과제

- ◇ 금융개혁회의는 15.12.23일 제17차 회의로 종료하되, 16년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 수행
 -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
 - 월 1회 개최를 원칙, 現 개혁회의 위원 위주로 선임 예정
-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판」을 바꾸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
 - 금융개혁의 효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국민·기업·시장의 체감도 등 기대수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
- ①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금융모델과 세부과제 70개가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
- ②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과제들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말 입법노력 및 후속조치에 만전
- ③ 금융감독·검사·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술금융의 투자 방식 확산 및 핀테크 활성화에 중점
- ④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금융공급 확대 노력과 만능통장(ISA) 등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 ⑤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보수·교육·평가 등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 유도

별첨1 금융개혁회의 주요 논의 과제 요약

1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을 통한 감독관행 개선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제2차 개혁회의(4.22))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제9차 개혁회의(8.27))
- 「예보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제9차 개혁회의(8.27))

○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방식 검사 도입

- * '15.7.1~12.17 중 실시된 총 462회 검사중 108회의 건전성 검사 실시
- *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폐지 : ('14) 17회 → ('15) 15회 → ('17) 원칙 폐지

√ 국내은행 사외이사 이OO씨, “우려했던 ‘일방 통행식 지적 행태’는 없었습니다. 감독제도 변화뿐 아니라 내가 속한 금융그룹의 구조적 어려움과 비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확인서·문답서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등 검사결과 입증방식을 개선

√ 금융회사 실무자 인터뷰(11월) : “현장에서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은 확인서가 없어졌고, 문답서라는 부분도 없어졌다”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7월)

-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 금융회사 검사역 인터뷰(11월) : “현장에서 전보다 인권을 생각하게 된다.”

○ 비공식 행정지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점검 개선시스템을 구축

2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자율과 혁신 기반 마련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제5차 개혁회의(6.18))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제10차 개혁회의(9.10))
- 「건전성규제 선진화방안」(제13차 개혁회의(10.29))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제15차 개혁회의(11.26))
-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제16차 개혁회의(12.10))
-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제16차 개혁회의(12.10))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제17차 개혁회의(12.23))

○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제고를 통해 경쟁, 혁신을 촉진

-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¹⁾, 네거티브 방식 확대²⁾,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³⁾ 등

- * 1) 은행·보험·금융투자업 경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 등
- 2) 금융지주사 겸직 확대, 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차단 규제 네거티브화 등
-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업종 확대,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 도입 등

○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¹⁾하고 합리적으로 조정²⁾

- * 1)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 시행 등
- 2) 대형 저축은행 등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은행수준으로 조정

○ 금융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쟁 여건 마련

-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 거래소 수시공시 대상 포괄주의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배구조 관련 공시 강화 검토 등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

- * 투자성 상품 판매시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화 등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향후 규제개혁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할 규범으로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③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제4차 개혁회의(6.3))
-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제4차 개혁회의(6.3))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제5차 개혁회의(6.18))
-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제5차 개혁회의(6.18))
- 「정보처리위탁규정 개정방안」(제5차 개혁회의(6.18))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제13차 개혁회의(10.29))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제15차 개혁회의(11.26))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¹⁾, 계좌이동서비스²⁾,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³⁾ 등으로 경쟁·혁신이 촉진되고 국민편익 증대

- * 1) 시장반응 : “두 메기의 등장으로 은행권 초비상”, “고객이탈 막기 위해 상품개발 등 자체 혁신 착수”
- 2) 이용실적(10.30~12.18, 만건): 접속 61.7, 변경 20.4, 해지 17.2
- 3) 자동차보험 등 총 217개 보험상품 비교가입 (11.30~12.15, 약 16만명 방문)

○ 간편결제*, 실물없는 모바일카드**, 생체인증(지문, 홍채 등)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

- * 삼성페이(가입자수 100만명 돌파, 누적 결제금액 1,000억원) 등
- ** 6개사 1.8만건 발급(발급비용 감소 및 기간 단축)

[참고]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

- < 일반국민(1,000명), 이해관계자(106명) 설문조사(한국리서치, 11월) >
- √ (국민) 66.3%가 핀테크 인지, 74.2%가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
- √ (핀테크 기업) 73.1%가 정부 정책에 긍정적

○ 핀테크 스타트업, 종사자수, 전자금융업 등록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산업도 성장

- * 스타트업(한국핀테크포럼 등록, 개) : ('15.5말) 44 → ('15.11말) 360
- * 종사자수(금융보안원 추정, 만명) : ('14) 2.43 → ('15) 2.56(예상)
- * 전자금융업등록수(개) : ('14말) 67 → ('15.11말) 84
- * 전자금융거래업 매출액(십억원) : ('14) 1,926 → ('15) 2,234(예상)
- * 모바일결제규모(십억원) : ('14) 3,193 → ('15.2분기) 5,720

④ 기술금융 안착 등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제4차 개혁회의(6.3))
-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제13차 개혁회의(10.29))

○ 기술신용대출 8만9천건, 26.2조원 공급('15.1~11월)

* ('14년)1.4만건, 4.7조원 → ('15.1~11월)8.9만건, 26.2조원 (평가액 기준)

- 기술금융 실시후 대출금리가 실시 전 대비 1.08%p 하락 (기술금융 미실시기업(0.72%p↓) 대비 0.36%p 더 크게 하락)

* 기술금융 실시기업 : 5.07%('13.7.~'14.6.) → 3.99%('15.7.~9.)
기술금융 미실시기업 : 4.84%('13.7.~'14.6.) → 4.12%('15.7.~9.)

- 순수 신용대출(무담보·무보증) 비중이 25%로, 일반 중기대출(11.5%)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시현(10월말 기준)

- 기술평가 소요기간 대폭 단축('15.4) 21.3일 → ('15.11) 9.8일

○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 6,570억원* 조성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4,510억원 및 지식재산권(IP) 투자펀드 2,060억원

○ 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철폐

* 연대보증 면제기업 : 1,400개 → 4~5만개

○ 산은·기은은 미래성장동력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14년 43조원 →18년 53조원)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를 활성화

[참고] 중소기업 및 취급기관의 높은 만족도 시현

-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400개) 대상 설문조사(11월, 한국갤럽) >
- √ 82.3%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 의견 표명
- √ 96.3%가 기술금융 이용 지속 희망

- < 은행지점장(3,305명) 대상 설문조사(11월, 한국갤럽) >
- √ 72.8%가 ‘무늬만 기술금융’이 사라지고 있다고 응답
- √ 81.3%가 기술금융은 5년 이내에 정착할 것으로 평가

- < 중소기업 CEO 및 은행지점장 심층토론(FGI) 中 >
- √ (중소기업) “신용이 부족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회사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기술금융이 큰 도움이 된다.”
- √ (은행)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일부 불만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사에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

⑤ 코넥스·코스닥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제2차 개혁회의(4.22))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제2차 개혁회의(4.22))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제2차 개혁회의(4.22))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제3차 개혁회의(5.18))
-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제4차 개혁회의(6.3))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제6차 개혁회의(7.2))

○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이 크게 활성화

- (코스닥시장) '15년도 신규상장 102개사, 그중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이 12개사로 모험자본 회수시장의 기능 충실히 수행

* IPO기업수(개) ('13년) 37 → ('14) 70 → ('15) 102

* 시가총액(조원) ('13년) 119 → ('14) 143 → ('15.12.23) 193

- (코넥스시장) 개장('13.7.1) 2년반 만에 시장규모가 7배 이상 성장하는 등 초기 모험자본 공급·회수시장으로 안착

* (상장기업, 개사) ('13.7.1) 21 → ('13.말)45 → ('14.말)71 → ('15.말) 108 <5.0배↑>

* (시가총액, 조원) ('13.7.1) 0.5 → ('13.말)0.9 → ('14.말)1.4 → ('15.12.23) 3.5 <7.0배↑>

○ 신규 파생상품* 공급을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관리수단 다양화 지원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7.20), 코스닥주식선물(8.3),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10.5)

** 미니코스피200옵션 일평균거래량(계약수): ('15.7)10,995 → ('15.12)64,516

○ 기업공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최소화

* 연간 1,591건 공시부담 경감 예상('14년 연간공시(22,420건) 대비 약 7%↓)

○ 실물 발행·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증권제도¹⁾', 기업 지배 구조 선진화와 우리 주식시장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²⁾' 도입 등의 과제도 착실히 진행

* 1) '15.10월 전자증권법 국회제출, 2) TF논의 및 12.2.공청회개최 → '16년 도입 예정

⑥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제6차 개혁회의(7.2))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제10차 개혁회의(9.10))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제10차 개혁회의(9.10))
- 「금융교육 강화방안」 (제11차 개혁회의(9.24))
-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 (제14차 개혁회의(11.12))

○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서민금융지원 노력을 강화

* 학계·언론 등 긍정적 평가 :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보다 관계형 금융 해야", "상호금융의 서민지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¹⁾, 청약철회권 도입²⁾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

* 1) '민원건수 위주 평가 → 제도시스템 등 종합 평가에 대해 금융회사언론 등 긍정적 : "금감원, 금융사 평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꾼다", "금융사 '줄세우기' 사라진다... 평가제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등

2)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반응

○ 금융교육 강화,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 등 소비자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처리 절차 관련 편익을 증대

- 금융교육 기회 대폭 확대* 및 '지식'에서 '생활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금융교육 효과·국민체감도 제고

* (1사 1교 대상 대폭확대) 1차 신청 1497개교 → 2차 신청 2531개교(전체학교의 22.1%) (취약계층 교육강화) 북한이탈주민('15.11.), 다문화가족('15.12.) 전용 교재 발간·배포 등

** (재미있는 금융) 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구 개발, 금융뮤지컬 실시 등

√ 책으로 익히던 금융, 뮤지컬·게임으로 배운다(매경, '15.10.15)

√ 내년 200만 명에 금융교육 실시...금융 문맹 벗어나(서울신문, '15.10.15)

- 보다 신속*한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 처리기간: (현행) 평균 42일 → (개선)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 피해구제: (현행) 민원서류 제출, 서면의견 등 증빙 → (개선) 민원서류 외 반론 기회 제공, 청문, 현지조사 등

⑦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제5차 개혁회의(6.18))
-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제6차 개혁회의(7.2))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제10차 개혁회의(9.10))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제12차 개혁회의(10.14))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제12차 개혁회의(10.14))

-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위탁 규제 폐지로 은행이 계열사 상품을 위탁판매하여 고객에게 **One-stop서비스** 제공 추진

√ 5개 은행지주*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상품의 단순 소개에서 벗어나 '16년 상반기 중 **One-stop 연계대출 서비스 시행**을 추진

* 신한·하나(저축은행 연계대출 既 실시 중), NH, KB, BNK금융그룹

- (은행) 가격결정 자율화, 부수·겸영업무 Negative화 등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 제고

√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고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천명(8.13)

- (보험)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간접 규제로 전환하는 등 22년만에 보험산업 전면 개편

- '15.12월 현재 4개 금융지주사에서 6개 복합점포* 운영 중

* 농협 2개(광화문, 부산), KB 2개(여의도, 도곡), 하나 1개(압구정), 신한 1개(강남)

√ 보험사 관계자 "지금까지 본 금융당국 발표 중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많은 혁신안을 담고 있는 것 같다. 보험사간 진검 승부가 벌어질 것이고, 싸움에서 지는 보험회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 (금투)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와 창의적인 서비스 개척을 적극 지원

√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번 방안이 금융투자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⑧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 추진

-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제7차 개혁회의(7.16))

- '현지진입(현지 인허가, 지점·법인 설립)→영업기반 구축→해외영업 확대'의 해외 진출 단계별 걸림돌 규제 제거

- (현지진입)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회신기간 단축, 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7월)

- (영업기반 구축)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허용, 자회사 등의 계열 해외법인에 대한 무담보 신용공여 허용(12.22)

- (해외영업 확대)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예: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의 최소지분을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면제(12.22)

-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및 금융협력 포럼, 공무원 초청연수 및 오·만찬행사 등 개최

* ① 정례회의 : 한·중·일(3월), 인니(4월), 일본(5월, 11월), 베트남(7월)

② 포럼·연수 : 한·영 금융협력포럼(5월), 인니 OJK 공무원 초청연수(10월), ASEAN주요국 국제금융협력포럼(12월)

③ 오·만찬행사 : 베트남 경제금융부총리 및 국내 금융회사 오찬(5월), 주한 ASEAN대사 초청 만찬(8월)

√ "신한은행은...인도네시아의 은행업 진출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지원과**...(중략)마침내 숙원사업을 풀게 되었다." (15.11.30. 신한은행 보도자료)

-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해외SOC펀드 21억불 금융지원협약 체결**(8.17)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해외 시장 진입부터 영업확대까지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중략) 금융사로서는 **해외 SOC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추진하는 SOC사업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5.7.17. 서울신문, "은행 20억불 규모 해외SOC펀드 조성" 제하)

9] 외환·세계·연금·투자금융 등 협업과제를 통해 금융의 외연 확대

- 「외환제도 개혁방안」(제2차 금융개혁 추진단 회의(6.11))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방안」(제7차 개혁회의(7.16))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제8차 개혁회의(8.13))
- 「중장기 금융세계 개선방안」(제3차 금융개혁 추진단 회의(8.25))
-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제16차 개혁회의(12.10))

- '99년 이후 유지되어온 외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자본거래의 사전신고제의 원칙적 폐지 등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
 - 비은행금융사들의 외환환업무 허용 및 PG사에게 외국환(국경간 지급·수령) 허용 등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벤처창업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
 - '15.10월 기준 신규 벤처투자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조 2천억원) 대비 36%가 증가하는등 투자 위축 심리 극복
 - 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였고 M&A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전용펀드(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 PEF가 설립한 SPC에 SI 참여 허용 등(10.20 국무회의 통과)
- ** '15년말 펀드조성 누적규모는 0.8조원 수준으로 전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 완료
 -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은 연 2,000만원까지 납입, 5년보유 후 발생이익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도모
 - 국내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산**을 발굴함으로써 연금 수익률 제고 및 금융사 역량 강화 도모
- * 해외 투자시 국내 위탁운용사 활용,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 ** 투자비중 추이('14년→'20년, %) : 해외·대체투자 27 → 35, 국내채권 55 → 45

10]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상시화 및 현장에로 즉시 해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현황」(제2차 개혁회의(4.22))

- 지난 9개월간 431개 금융회사, 156개 중소기업, 117명의 금융 소비자를 방문하여 3,575건의 건의사항 접수 (수용률 45.8%)
 - 지난 8월 31일 개최한 「현장점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위원장·원장 직보(블루시트) 방식을 신설
 - 건의과제의 법적확실성 보장을 위한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 노력도 경주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규칙' 제도 정비 : '15년 비조치 의견서 회신은 총 100건으로 '01~'14년간 합계 회신 건수(10회)를 상회
-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이용자로 확대하여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CCTV 역할을 강화
 - 중소·벤처기업 금융이용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위 남용 집중 검사 지시 (현장경보 발령)
 - 소외되기 쉬운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듣기 위해 소비자와 소비자접점의 금융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활동 개시
- 대국민 신뢰제고 및 체감형 규제개혁에 기여하여 감사원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행정혁신의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매김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 금융업실무자 96.5%가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

별첨2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

추진단계: ● 제도개선완료 시행중(25) ○ 방안발표, 일부시행(17) △ 방안발표, 제도개선 중(19) √ 방안마련 중(9)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1	감독·검사·제재 개선 (코치 → 심판)		
1-①	금융위·금감원간 역할 정립	실행방안 확정 (7월)	●
1-②	컨설팅 검사 정착	검사·제재 개혁방안 (4.22)	●
1-③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	제재개혁 추진방안 (9.2)	○
2	시장기능 존중 (금융소비자 보호 여건 성숙 전제)		
2-①	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2-②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비교공시 강화방안 (7.27)	△
2-③	금융교육 강화	강화방안 (10.15)	○
2-④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역할 강화방안 (9.10)	○
3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3-①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점검반 출범 (3.26)	●
3-②	유권해석 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	운영규칙 개정 (12.2)	●
3-③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포털 오픈 (3.31)	●
4	보수적 관행혁신		
4-①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개선방안 (7.9)	●
4-②	20대 금융관행 개선	20대 과제 (11.16)	○
4-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도입방안 (9.16)	△
4-④	금융권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5	금융사 자율책임 정착		
5-①	금융사고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5-②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노력	△
5-③	금융 윤리규범 정립	12월중 추진	√
5-④	금융의 날 제정	행자부와 협의중	√
5-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도입방안 (7.6)	△
5-⑥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16년초 추진	√
6	창의적 금융 우대		
6-①	금융회사내 제재·면책시스템 점검·개선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8.13)	●
6-②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	지속 추진	√
7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성장 유도		
7-①	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7-②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강화방안 (11.4)	△
7-③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강화방안 (10.30)	△
8	기술금융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		
8-①	기술신용대출 규모확대	기술금융 로드맵 (8.27)	●
8-②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	IP펀드조성(6.29)	●
9	기술금융 전문역량 확충		
9-①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배양	전문 교육과정 실시 (8.18)	●
9-②	기술신용 평가 인프라 고도화	기술금융 개선방안 (6.8)	○
10	거래소 구조개혁		
10-①	코넥스 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활성화 방안 (4.23)	●
10-③	거래소시장간 경쟁 강화	경쟁력 강화방안 (7.2)	△

번호	과제명	추진현황	추진단계
10-④	전자증권제도 도입	도입방안 (5.21)	△
10-⑤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규제선진화 방안 (6.1)	○
11	사모펀드·모험자본 획기적 육성		
11-①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강화방안 (4.23)	●
11-②	벤처투자 활성화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7.20)	○
11-③	클라우드 펀딩 도입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예고(7.23)	△
11-④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강화방안 (10.14)	△
11-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16년초 추진	√
12	국가자산·민간금융간 시너지 창출		
12-①	자산운용 협의채널 마련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12-②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연금자산관리방안(12.21)	△
13	핀테크 생태계 구축		
13-①	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	지원협의체 출범 (4.14)	●
13-②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지원센터 개소 (3.30)	●
13-③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확립방안 발표 (6.19)	●
13-④	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7.7)	△
13-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	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7.22)	●
14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4-①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5.18)	●
14-②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도입방안 발표 (6.18)	○
15	빅데이터 활성화		
15-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6.3)	△
15-②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16.1.1일 출범 예정	△
16	금융규제 유형화·개선		
16-①	그림자규제 개선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9.18)	○
16-②	건전성규제 합리화	선진화 방안 (10.29)	○
16-③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12.3)	○
16-④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2.16)	△
16-⑤	시장질서 규제 개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12.10)	△
16-⑥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법제처 심사중 → '16.1월 시행	√
17	칸막이 규제 완화		
17-①	복합점포 활성화	추진방안 (7.3)	●
17-②	보험 판매채널 정비(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오픈 (11.30)	●
17-③	보험업 진입·인가 기준 완화	인가정책 개선방향 (5.26)	●
17-④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쟁력 강화방안 (6.22)	●
17-⑤	보험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로드맵(10.19)	○
17-⑥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16년중 추진	√
17-⑦	증권·보험 지급결재참여 확대	지속 검토	√
18	신상품·신영역 개척 지원		
18-①	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중장기 포함)	세제개편안 완료	△
18-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제개편안 국회통과(12.2)	△
18-③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10.30)	●
18-④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금융권 역량강화	활성화 지원방안 (7.16)	○
18-⑤	해외 SOC 사업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해외SOC펀드 출범 (8.17)	○
18-⑥	외환제도·규제 개선	외환제도 개혁방안 (6.29)	○
18-⑦	100세시대 대비 상품개발	통합연금포털 오픈 (6.11)	○

별첨3 금융개혁회의 심의안건

회 차	안 건
제1차 (3.25)	① 금융개혁 추진 방향 - 금융개혁 세부과제 - 금융개혁 분과회의 설치방안
제2차 (4.22)	①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②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③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④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⑤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⑥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현황
제3차 (5.18)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합리화 방안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
제4차 (6.3)	①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②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③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 ④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향
제5차 (6.18)	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② 금융IT 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 ③ 금융지주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④ 정보처리위탁규정개정방안 ⑤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
제6차 (7.2)	①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③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④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제7차 (7.16)	①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②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방안

회 차	안 건
제8차 (8.13)	①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제9차 (8.27)	①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 ②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③ 예보공동검사관행 개선방안
제10차 (9.10)	①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②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③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제11차 (9.24)	① 금융교육 강화방안
제12차 (10.14)	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②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13차 (10.29)	①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i)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ii)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②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③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
제14차 (11.12)	① 금융민원·분쟁 처리 개혁방안
제15차 (11.26)	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②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제16차 (12.10)	①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②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③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17차 (12.23)	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② 금융개혁회의 경과 및 향후계획